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일시·장소 | 2018. 11. 28(수) 14:00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일시·장소 | 2018. 11. 28(수) 14:00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PROGRAM

사회: 백운기(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 시간 | 식순 | 내용 |
|--------------------------------|------|--|
| 13:30~14:00 | 등록 | |
| 14:00~14:10 | 개회식 | 내빈소개 및 인사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 좌장 :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 |
| 14:10~14:30 | 주제발표 |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박종효 사)일하는공동체 대표 |
| 14:30~15:30 | 종합토론 | 토론 1. 함창모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3.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 토론 4.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
| 15:30~15:50 | 질의응답 | 질의응답 |
| 15:50 | 폐회 | |

CONTENTS

05 ■ 주제발표

주제발표

| 박종효 사)일하는공동체 대표

34 ■ 종합토론

좌장 :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토론 1.

| 함창모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3.

|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

토론 4.

|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주제발표

박종효

사)일하는공동체 대표

사회 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사) 일하는 공동체 대표 박종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생계 문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 대책으로 공공근로, 희망 근로 프로젝트, 자활근로사업 등 정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시작.
-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고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정부, 공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책 마련,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 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와 비교하여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 및 청년 고용률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경제 및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선 7기 충청북도는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 이슈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인 미래비전 2040을 수립하였음.
- 미래비전 2040(2017)에 의하면 충청북도 도민들은 충북이 해결해야 할 미래 도전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교육 문화 여가 등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등을 제시하였음.
- 충청북도에서도 취약 계층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해 도-농 상생 생상적 일자리 확대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일자리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사회 변화 속에서 양질의 근로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1) 문헌조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발달 과정 및 미래 사회의 일자리 변화 파악
- 2) 사회적 일자리 전문가 FGI 및 인터뷰를 통한 중복의 사회적 일자리의 현재와 과제 파악
- 3) 1) +2) 종합 분석을 통한 사회 변화에 따른 중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Ⅱ.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일자리 정책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발달 과정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사회적 일자리는 국제포럼 이후 전병유 외(2003)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됨.

<사회적 일자리 구분>

| | 공익형 일자리 | 비공익형 일자리 |
|----|--|--------------------------------------|
| 국가 | 국가의 고유한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일자리 | |
| | 개인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에서 생겨나는 일자리 | |
| | 공공근로(빈민에 대한 공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 |
| 공공 | NPO(NGO)등이 행하는 공익 사업에서 생겨나는 일자리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 형태로 행해지는 비공익형 일자리 |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 등에서 공익형 사업을 할 경우 생겨나는 일자리 | |
| 사전 | 민간 영리기업에서 행하는 복지서비스, 환경사업,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등에서 생겨나는 일자리 | 시장에서 일반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일자리 |

<사회적 일자리 사업 구분>

| 대분류 | 수행주체 | 민간의 역할 | 세분류 | 사업명 |
|---------------|-----------|------------------------------|-----------------------------|--|
| 공공부문별 사회적 일자리 | 국가 직접수행방식 | 역할 없음 |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사업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
| | | 역할 없음 | 정부 직접수행방식 | 방과 후 교실 사업 장애아 교육보조원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
| 협회의 사회적 일자리 | 민간 위탁방식 |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공공근로성 사업 | 정부지원을 통한 민간위탁방식 | 방문 도우미 사업(중증노인, 장애인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연극 국악 영화시간제 강사들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
| | | 민간 자원이 결합되어 수익구조 확보를 추구하는 방식 | 민간위탁을 통한 수익구조 확보 및 민간자원결합방식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

자료 : 한국사회개발연구원(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특성 비교〉

| 구분 | 사회적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
|----------|---|---|
| 개념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개인 또는 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생성되는 일자리 |
| 일자리 제공주체 | 공공 비영리 단체 | 공공,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
| 주요대상 |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 사회취약계층+일반(전문 역량 보유자) |
| 관점 | 일자리 + 복지(고용복지, 사회보장) | 산업구조, 경제 |
| 가치 | 공공성(공익성)강조 | 시장성(경제성)강조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상당부분 중첩되는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공익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경기복지재단, 2016).

2) 사회적 일자리의 탄생 배경 및 발달과정

-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빈곤과 실업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던 '구호 활동'에 주력을 하던 각 지역의 비영리 조직들 중 일부는 차츰 '일자리 창출'로 활동의 방식을 변경 시켜 나감.
- 「생활 보호법」의 개정(1997), 5개의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사업 모델 : 봉제, 건설, 청소, 도시락) 등과 같은 시장 진입형 창업 모델로 전개
- 실업 종합 대책(1998) - 공공근로 사업 진행
-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국제 포럼(2000)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국적 변용의 개념으로 사회적 일자리 채택
- 자활지원사업 본격 가동(2000)
- 8개 시도 중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2003), 시범 사업 전국확대(2004), 공익형과 수익형 추진 (2005),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
-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2004) 실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장애인 복지법 제 21조(직업),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2007) 실시
- 희망근로프로젝트(2009) 1차 (25만명), 2차(10만명) 일자리 제공

3) 주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 내용과 현황

자활 사업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함.

<자활사업 유형>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자활사업 안내(I) .

<2018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기준>

(원/인·일)

| 구분 | 시장진입형 /기술 자격자 | 인턴 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기술 자격자 | 근로유지형 |
|----------|-------------------|------------------|------------|-------------------|--------------|
| | |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 |
| 지급액 계 | 42,210 /44,210 | 42,210 | 38,910 | 38,190 /40,190 | 27,110 |
| 급여단가 | 38,910 /40,910 | 38,910 | 34,890 | 34,890 /36,890 | 23,810 |
| 실비 | 3,300 | 3,300 | 3,300 | 3,300 | 3,300 |
| 표준소득액(월) | 1,011,660 | 1,011,660 | 907,140 | 907,140 | 619,060 |
| 비고 | 1일 8시간, 주5일 | | | | 1일 5시간, 주 5일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자활사업 안내(I) .

• **사업 추진 실적**

2016년 기준으로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는 99,574명 참여자 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와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제외한 자활근로 참여자 수는 39,150명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됨(김윤영, 2018).

• **사업의 문제점**

자활사업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유용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낮은 급여 수준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실제 참여자들의 삶에 자립 자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 수급권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음(김윤영 외, 2018).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고실업 시기에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함(행정안전부, 2009).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 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 유형 | 사업구분 |
|----------|---------------------------|
|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 기술 습득 사업 |
| | ② 시적일자리 사업 |
| | ③ 자원재생사업 |
| 지역기업 연계형 | ④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 |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 서민생활 지원형 |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 | ⑦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 지역공간개선형 |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 활용 사업 |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안내.

희망근로 프로젝트

• 사업 내용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 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 일자리 취득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희망 근로 상품권'의 지급을 통해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 하였음.

• 추진 실적

- 2009년 1차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복지대책 차원에서 사업비 17,070억 원을 투입해 차상위 계층 가구, 휴 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여 명에게 6~11월까지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함.
- 2010년 2차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사업비 5,727억 원을 투입해 근로 취약계층 10만명에게 3월~6월까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함.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매김함.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내용>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 노인 사회 활동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 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 | 재능 나눔 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Ⅱ)".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내용>

| 유형 | | 주요내용 |
|-----|------------|--|
| 시장형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 | 인력 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와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
| | 고령자 친화 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 |
| | 기업 연계형 | 기업이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지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Ⅱ)".

• 사업 추진 실적

- 2016년 기준 참여 노인은 전체 노인의 6.1%를 차지하며, 참여 기관은 1,200개, 전담 인력은 2,685명
- 연도별 예산 현황 2011년 319,536백만원, 2013년 335,368백만원, 2015년 681,601백만원으로 점차 증가함. (국회예산정책처, 2016).

• 사업의 문제점

201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급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강은나 외, 2017).

여성일자리 사업

- 정부는 2008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여 여성 인력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음(최은희, 2017).
-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은 2차(2015-2019)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과제>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 중점과제 | 세부과제 |
|----------------------|--------------------|----------------------------|
|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 |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전문화 | | |
|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고용연계 강화 | | |
| 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 |
|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 |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 |
| | | 여성창업 지원 강화 |
| | | 여성 농어업인의 취창업 역량강화 |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 활동 촉진 기본 계획(안)".

충청북도는 2006년부터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과 경력유지를 실질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여성인턴제 사업을 실시하였음.

<충북여성 인턴제 과정 내용>

| 분야 | | 직종(과정) 명 | 직종 수 | | 과정 수 | |
|-----------|----------|---|------|---|------|----|
| 클럽 및 지역복지 | 아동청소년 | 어류케어, 인성교사, 어린이 독서관리사 | 3 | 8 | 6 | 13 |
| | 노인 및 영유아 | 경보담당자 지도사, 후식케어 지도사 영유아 보육 클로미 | 3 | | 4 | |
| | 지역사회 | 지역방문상담원, 협력사례 관리자 | 2 | | 3 | |
| 행정 관리 | | 노동사무원, 경보담당 행정도우미, 지역수요맞춤형 | 3 | | 10 | |
| 전문분야 | | 원어민 보조교사 향의농술 지도사 청소년커리어코치, 역사문화체험지도사 지역사회조사원, 디지털미디어 제작자 전략산업 맞춤형 | 7 | | 11 | |
| 취창업 | 취업 | 취업코디네이터특성화취업코디네이터 | 3 | 4 | 8 | 9 |
| | 창업 | 지역창업플래너 | 1 | | 1 | |

자료 : 충북연구원(2017). "충북여성인턴제의 성과발전과 발전방안".

• 사업의 성과

- 충북 여성인턴제가 참여여성들의 성장과 역량강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턴 종료 후에는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여전히 취업 및 고용유지 혹은 가사, 육아, 가족 관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이러한 한계는 낮은 일자리 창출효과에 반영되어 있고, 이로부터 연유한다고 보여진다고 하였음.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단일 방식으로 인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업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민경자 외, 2017).

장애인 일자리 사업

① 장애인일자리 사업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이수용 외, 2018).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 일반형 | | 복지형 | | 특화형 | |
|-------|-------|-----------------------------|----------------------------------|--------------------|--------------------|--------------------|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
| 모집 기관 | 업무 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 케어 등 |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

자료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안내".

• 사업 추진 실적

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단위 : 명)

| 사업유형 | | 연도 | | |
|---------|-------------|-------|-------|--------|
| | | 2012년 | 2014년 | 2018년 |
| 일반일자리 | 전일제 | 3,500 | 4,844 | 4,746 |
| | 시간제 | | | 1,525 |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 300 | 600 | 76 |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 | 300 | 277 |
| 복지일자리 | | 7,700 | 8,850 | 10,044 |

자료 : 한국장애인 개발원 (<https://www.koddi.or.kr>)

• 사업의 문제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 영역 | 주요내용 |
|----------|--|
| 사업자체 | 예산확보, 일자리 확충(양, 질), 민간형 일자리로의 전이 필요,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복지혜택 및 휴가 보상제도 도입 필요, 참여자의 일반고용 시 인센티브 지급 필요,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연령별 타겟 일자리 마련필요, 사업 반복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참여 대상 선발 기준 마련, 사업 목적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적정 사업명 제시 필요 등 |
| 관리 /전달체계 |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 알선 기관 연계필요, 선발 및 운영과정에서 전문기관 연계 혹은 전담인력의 필요성 대두, 인력 및 권한 대폭 강화필요, 민간부문 일자리 진출 수 등 산출 기준의 성과 지표 필요 등 |
| 정책 | 고 용전이 대책 필요, 일자리사업 목적성 명확화 필요 중앙 지원 체계 강화 필요, 장애인일자리사업 근거 법 확대로 사업의 기반 강화 필요 등 |
| 기타 | 일자리 관련 통계자료 구축, 교육(참여자, 담당자 대상 등), 교육자료 다양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범위와 정의의 명확화 필요, 기초수급자 근로유인방안 필요, 장애인일자리 모델 이론 정립 필요 등 |

자료 : 이수룡 외,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연구".

②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제도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고용 의무 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표준 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 수, 중증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

| | 기업체 수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
| 장애인 근로자 수 | 53 | 252 | 45.0 | 52.47 |
| 중증 근로자 수 | 52 | 182 | 30.8 | 33.05 |
| 장애인 고용률 | 53 | 100 | 68.2 | 23.43 |

자료 : 한국장애인공단(2017).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68.2%이었으며 장애인 고용률 평균 68.2% 일반형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54.9%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한국장애인공단, 2017).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정부 재정 투자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최 15만명에서 최대 142만명(보건복지부, 2016) 규모로 추정 (유태균, 2017).
- 2018년 8월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교사나 아이 돌보미, 아동 안전 지키미, 성폭력 피해 지원,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 4천개 창출 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2. 사회 변화에 따른 일자리 환경의 변화

1)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

-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일차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퇴직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되고 있음(박가열 외, 2016).
- 클라우드 슈밥은 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72억명인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0억명, 2050년에는 90억명으로 증가하는데, 이 때 함께 형성된 강력한 인구구조는 '고령화'라고 표현하고 있음 (클라우드 슈밥, 2016).
- 한국의 경우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박가열 외, 2016),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50년까지 1000만명 이상 감소하여 2060년에 2,187만명(총 인구의 49.7%)으로 전망(이인재, 2017).

-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5년 11.6%에서 2015년 14.5%로 증가하여 2035년이 되면 2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지수는 2005년 63.1%에서 2015년 106.7%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2035년에는 355.2%로 예측(충청북도, 2018).
- 사회 노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부양해야 할 노령화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클라우드 슈밥, 2016).
- 이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악화 등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인재, 2017).

2) 4차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준비위원회의 미래 이슈 분석에서는 맥킨지 컨설팅 그룹, MIT, IBM, WEF, 가트너 등 국외 전문기관이 발표한 유망기술과 삼성 경제 연구소,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한국 과학 기술 정보원, 특허청 등 국내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유망기술 등을 참고하여, 기존의 기술 분류나 표준 분류 등의 체계와 관계 없이 유망하다고 발표한 기술(단위기술, 시스템기술)을 대상으로 도출하였음(이광형 외, 2015)

<미래 기술 주요 내용>

| 기술 | 주요 내용 |
|--------|---|
| 사물 인터넷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 홈,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카 등 |
| 빅데이터 | 기존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서빙 구현, 개인 검색 등에 활용 |
| 인공지능 | 지성을 갖추고 사고할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를 의미. 인간 체스 챔피언과 겨루어 이긴 IBM의 딥블루, 후어노이드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을 통한 감성 로봇 등 |
| 가상현실 |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HCI), 원격 의료, 홀로그램 등 |
| 줄기세포 | 무한증식이 가능한 자가 재생산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 세포를 의미. 장기이식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장기 재생, 혈액 대체를 통한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함. |

표

| 기술 | 주요 내용 |
|------------------|--|
| 우전공화 분자생물학 |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기술로 우전자와 같이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산물을 얻어내는 기술을 의미.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의 대량 생산, 태아의 유전적 기형검사, 유전자 재조합 식물, 유전자 선택 태아, 개인맞춤형 의료, 희귀종 우전자 은행 등을 가능하게 함. |
| 분자영상 | 세포나 그 이하 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을 생체 내에서 영상화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화 하는 기술을 의미. MRI, PET-CT처럼 인체를 절제하지 않고, 암 노출종과 같은 중추질환의 조기 발견에 활용 |
| 3D 프린터 | 3차원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 및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 조립과정이 없는 제품생산, 인공 관절 및 뼈 제조 등에 활용 가능 |
| 신재생 에너지 |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환경 위해성이 적은 에너지를 의미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등 |
| 온실가스 저감 기술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 ₂ , CH ₄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감축시키는 기술을 의미.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탄소 순환형 바이오 화학공장 등 |
|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 | 에너지자원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 에너지 하베스팅, 플라스틱 재활용, 희유금속 재활용, 핵연료 재활용, 폐수 재활용 등 |
| 우주 기술 | 우주 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우주공간의 이용탐사와 관련되는 기술을 의미. 우주발사체, 기상항공 위성, 달 탐사선, 우주의 희소자원 탐사선 등 |
| 원자력 기술 | 원자핵 반응으로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 원자력 발전, 핵융합 발전, 동위원소를 활용한 정밀 측정, T-ray 등 피폭량이 적은 비파괴적 검사에 활용 |

자료: 이광형 외,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준비 위원회(2015),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 2016년 1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준으로 일자리 5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은 노동 시장은 전문적 기술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더욱 편중 될 것이며,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숙련 노동력이나 평범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세계 위험 보고서(2016) 소득 격차 확대, 실업 혹은 불완전 고용 그리고 심각한 사회 불안 사이에 가장 큰 상호 관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
- 미래 창조과학부(2015)기술 영향 평가 자료의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관련 해외 연구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Oxford는 컴퓨터화로 인하여 미국 일자리의 47%가 없어질 위험 존재 특히 운송 업자, 사무직과 행정직, 노동생산 직종이 고위험군으로 제시됨. BCG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높은 임금 상승률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로봇으로 인한 노동 대체율이 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특히 한국은 세계평균보다 4배나 높은 노동 대체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40%의 제조업의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
- 고도의 기술을 지닌 최상위 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획득 할 수 있겠지만, 단순기술, 기능직 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소멸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 시장 내부에서는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임.
-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장기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업의 증가로 이어 지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재교육훈련 기회의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에 따른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함(부산발전포럼, 2017).

3) 노동 환경의 변화

① 충청북도 고용 현황

충청북도의 고용률을 살펴 보면 2005년 58.1%에서 2015년 62.1%로 연평균 0.3%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라면 2035년까지 6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6> 연도별 고용률

(단위 : 년, %)

|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2035 |
|-----|------|------|------|------|------|------|------|
| 고용률 | 58.1 | 59.8 | 62.1 | 62.3 | 63.7 | 65.1 | 66.5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임금과 근로 시간을 조사한 시도별 임금 및 근로 시간 보고서(2017)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2017년 4월 기준 사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3,304천원)은 전년 동월 대비 120천원(+3.8%) 증가하였으나, 전국 대비 217천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 근로자 1인당 총 근로시간(181.1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4.5시간(-2.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7.9시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임금총액 및 근로시간>

(단위 : 천원, %)

| | 임금총액 | | | | 총근로시간 | | | |
|----|--------|--------|-----|-----|--------|--------|------|------|
| | '16.4월 | '17.4월 | 증감 | 증감률 | '16.4월 | '17.4월 | 증감 | 증감률 |
| 충북 | 3,184 | 3,304 | 120 | 3.8 | 185.6 | 181.1 | -4.5 | -2.4 |
| 전국 | 3,416 | 3,521 | 105 | 3.1 | 176.7 | 173.2 | -3.5 | -2.0 |

자료 : 고용노동부(2017). "시도별 임금 및 근로 시간 보고서".

충청북도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정함.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충청북도 일자리 세부 추진 내용 >

| 분야 | 추진 내용 |
|--------------|---|
| 청년일자리 | 충북형 청년 공제, 청년 임금 격차해소 지원 청년 창업 배이스캠프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일+경원 청년일자리 사업」 |
| 여성일자리 | 새일 여성 인턴제,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 사업 등 |
|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 9988 행복 나누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자활 근로사업 등 |
| 중장년 일자리 | 생산적 일손복사 |

자료 : 충청북도인터넷신문(2018).

② 주 52시간 상한제와 노동 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국가 중 2위.
-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 행복 지수,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 재해 등의 주요 원인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과 관련 하급 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논란 지속됨.
-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연장 휴일 근로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장시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고용노동부, 2018).
-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줄어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만명 가량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가운데 22.4%인 813곳에서 총 2만9151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간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이 일부 남아 있고 단축 대상 사업장이 당장은 300인 이상 규모로 제한되긴 했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조사로 나타남.

4)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 지역의 노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와해 되어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실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과제>

| 분야 | 추진 과제 |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별정 기반 구축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별정 기반 구축 -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관리 -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임 창출 |
|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 혁신 |
|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 -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 지원 - 시책 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 모델 창출 |
|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 - 우수사례 발굴 확산 - 범정부 추진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② 취약계층 돌봄 체계 구축 -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돌봄 관련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화 요구, 분절적 예산사업 단위가 아닌 포괄적인 접근필요, 보건과 복지의 통합, 재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통한 당사자의 삶의 질 제고,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실시.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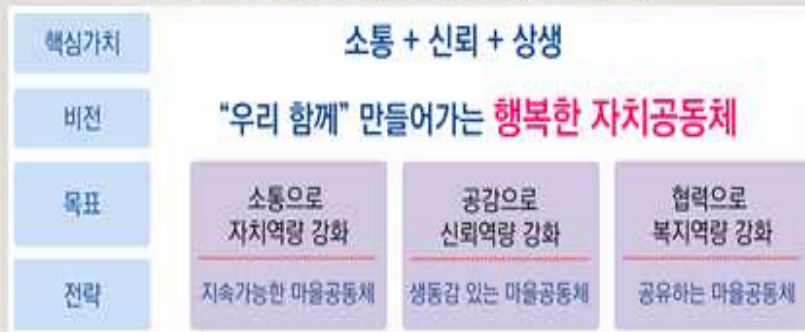
| 검토과제 | 세부내용 |
|--------------------------|---|
|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 |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 사회서비스의 단계적 확충 - 지역사회 안심 생활 지원 서비스 |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 - 재가 취약 계층 건강권 보장 - 지역사회 중심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 - 의료관리체계 개선 - 전격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 -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경로 설정 - 주거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 -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강화 - 커뮤니티케어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 강화 |

자료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2018). "한국지역사회복지체계 주제 학술대회 자료집".

③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활성화

충청북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계망으로 사회, 경제,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등장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2016. 12. 30)』를 제정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충청북도, 2018).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비전, 목표,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지속발전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공동영 사업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
| 정보기반 구축 |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마을공동체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
| 계획-관리체계 구축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주민의견 반영구조 확립 |
| 협의체계 구축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의 위한 협의체계 구축 |
| 공동체 성장관리 | 마을공동체 관련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업무 추진 시 DB 활용 |
|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배서 및 우수 사례집 제작 보급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와 인식 제고 |
| 주민 역량강화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발굴 및 육성 |
| 공공 역량강화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및 인식개선, 전문지식 제고 |
| 지역 역량강화 | 지역 비전 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유 및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구축 |
| 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 충청북도 사회경제적 기업의 공공기관 및 공동체와의 협력 지원을 통한 기업 및 공동체의 시장 지속성 보장 |
| 공동체 간 협력강화 | 마을공동체 설립 초기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민과 관의 관계를 정립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여망은 정의해나가는 단계의 사업 |
| 마을과 마을 연결하기 (상생네트워크) | 마을공동체가 안정화에 들어선 이후, 다른 마을과 연계를 통해 성공사례를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함 |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터다지기, 공동체(관계) 형성,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단계별 마을공동체 맞춤형 지원 |
| 공동체 활성화 의제 발굴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 지역 자원 특성 의제에 기반하여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
| 주민모임 활성화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형성단계 터다지기, 공동체 관계형성 / 단계를 거쳐 기반 구축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공부사업 진행 |
| 우리마을 가꾸기 | 이전 단계의 저용 모델과 정밀도로 유대관계를 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을 가꾸기 활동 실시 |
| 우리마을 살리기 |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마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 마을공유자원 집중하기 | 마을 내 공유 공간,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보일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마을 문명초 생산 |

충청북도 2018. "충청북도지속발전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맞춤형 사업

| 유형 | 주요사업 및 영향 |
|----------|---|
| 안전·안심 |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강화하면 보행, 자연재해와 범죄, 인제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 |
| 역량 | 전문보서관과 주민공동체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마을의 기회 제공하는 모델 저소득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이 국민 사회참여를 감소시키고 마을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 |
| 마을 | 마을이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으로 마을에서 아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통한 어르신들의 마을공동체 참여에서 실시하고 세대간 함께 어울리고 이해하면 마을공동체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
| 문화·역사·예술 |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특색 살리고 주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델 (마을 갤러리, 마을 역사 카페 등) |
| 환경/에너지 | 지역 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중심으로 반상의 전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한 마을을 조성하는 모델 |
| 발전 | 자연재해나 재난이 있었던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마을 복원기 활성화와 활동 중심의 모델 |
| 사회적경제 |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년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극대화 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델 |
| 자연가치 | 습이나 하천, 강과 같은 자연에 인접한 마을이 자연을 보전 및 보호함으로써 마을과 자연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긍정적인 마을 모델 |

자료 : 홍성표 등, 2018, "마을공동체지속발전 기본계획"



④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17년 12월, 68곳 선정), 전문연구 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 주요 내용>

| 정책 목표 | 3대 추진 전략 | 5대 추진 과제 |
|------------------|---------------|---|
| ① 삶의 질 향상 | ① 도시 공간 혁신 |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정비 |
| ② 도시 활력 회복 | |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 |
| ③ 일자리 창출 | ②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참여 유도 |
|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 ③ 주민과 지역주도 |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살가 내몰린 현상에 선제적 대응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⑤ 공생의 지역 경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Charles Gid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Charles Gide는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적으로 중점적인 경제 체제가 되며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보다 공평한 사회적 경제체제로 시장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제 개념을 사용하였다(주성수, 2017).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금융 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경기회복, 지역 개발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갖추어 왔음.
-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2007)되었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2010)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2011)으로 사회적 경제 제도 마련

- 사회적 경제는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관련된 지역 경제 회복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를 발전하게 하고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구성
-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활동이 있으며,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특히 지역에서 고용 위기에 노출된 장애인, 실업자, 빈곤층 여성 가정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 식품 안전·교육·의료 서비스 제공, 생활 재개발 및 이용, 각종 주제적 모임을 통한 생활 공동체 형성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추진에 기여(충청북도, 2017).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발전 전략>

| 구분 | 사회적 경제의 도입 배경 | 발전 전략에 대한 필요성 | 공공체 부문에 대한 지원 |
|------|---|--|---------------|
| | | 사회적 경제가 비영리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
| 추진전략 | 성장인프라 구축 | 진출분야 확대 | |
| | 사회적 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 과업성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 |
| 정책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체계 및 정책담당 확립 · 민·관 합동사업 제도 · 민·관 합동 지원 · 인력양성 체계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 주거환경 분야 진출 · 문화예술 분야 진출 ·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 소셜 벤처 분야 진출 ·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 |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18).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최영출(2017)은 "충북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특성 그리고 전망 연구"에서 충북의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특성을 다음 같이 제시하였음.

- 시민 운동이 청주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 운동이 충북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도 및 시군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중간 지원 조직 기관은 사단 법인 형태의 (사)사람과 경제 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 관련 유관조직들 상호간, 특히 사회적 기업 간에 거의 네트워킹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지역발전 효과를 보면, 사회적 경제 종사자 수가 전체 충북 고용자 수의 약 0.48%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약 0.8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요인으로 1) 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사회적 경제 지원 의지, 2) 중간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3) 사회적 경제의 공익적 홍보 강화, 4) 사회적 경제 기업이 리더십 강화, 5) 사회적 경제조직의 네트워킹 강화, 6)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강화, 7) 사회적 경제 제품의 공공 기관 우선 구매 필요

Ⅲ. 충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역별 일자리 탐색을 위해 지역 일자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 실시.

- 2018년 9월 28일 자활, 여성 분야, 장애인, 사회서비스전문가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
- 2018년 10월 17일 노인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2. 참여자 특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활, 여성, 장애인, 노인, 사회서비스 분야로 나누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참여자로, 지역에서 각 분야별 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를 FGI 참여자로 선정함.

| 연번 | 분야 | 소속 및 직위 | 구분 | 경력 |
|----|-------|---------|----|-----|
| 1 | 자활 | 기관장 | P1 | 20년 |
| 2 | 여성 | 기관장 | P2 | 12년 |
| 3 | 장애인 | 부장 | P3 | 16년 |
| 4 | 노인 | 기관장 | P4 | 18년 |
| 5 | 사회서비스 | 기관장 | P5 | 18년 |

3. 조사내용

각 영역별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및 신규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청취.

4. 연구 윤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내용이 녹음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음.

5. 결과

1)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① 참여자 특성 반영이 되지 않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운영

- 현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지만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 되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② 중앙정부 중심, 고용 중심의 사업 운영

- 참여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중앙 정부 중심으로 획일적인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함.
-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사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오히려 경쟁 고용 시장 진입을 종용하여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민과 관의 파트너십이 사라졌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업의 전달자로, 민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함.

③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달 체계에 대한 지원 부족

-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강화로 각 영역별 일자리사업의 양적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담당자의 역량은 서비스의 효과적인 진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현재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전달체계인 기관에 대한 지원은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어 전문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음.
- 종사자들의 업무 과부하는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취약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④ 분야별 일자리 제안

- 노인일자리 - 배달 업무, 재활용 터미널 등
- 여성일자리 - 일가정 양립가능일자리 (다양한 시간대의 일자리, 동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보편서비스 제공
- 장애인 - 지역사회 기업체 의식변화를 위한, 장애인 적합 창출(표준 사업장 확대)
- 자활 - 농촌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농사, 생태 교육 전문가 등)

IV. 결론

1. 충북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1)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가치 전환 필요

- 일자리에 있어 생산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생산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반 사회적이 아니면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역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고 추진

- 고용과 복지의 결합한 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마을 단위 경제 활동 단체 구성 지원

3) 지역사회의 문제를 일자리로써 해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민민 네트워크가 상시 가동

-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수행 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취약 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노동시장에 등 떠미는 구조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를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에서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다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미 기존의 취업 알선, 정보의 제공 등은 총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생산성이 기준이 아닌 분배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고민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 주체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복지의 영역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가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 나아가야 할 영역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

함창모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토론 1.**함 창 모**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일자리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이후 정부의 재정투자 일자리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분야와 참여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로 그 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큰 미래사회 변화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입니다. 2017년 현재 충북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로 전국 72.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전망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40년 54%를 기록하여 현재 대비 17%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현재 15.7%에서 2040년 35.4%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은 향후 여성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증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또한 일자리의 양적증가를 위해서 기존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북지역에서의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대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도 2017년 현재 49.1세로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기 퇴직 증가에 따라 노후 준비가 미흡한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들의 소득절벽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 목적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5060세대의 신중년들은 물론 70대 중반까지의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적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중년들을 위한 사회적일자리는 정부주도의 재정투자 일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수요와 사회적가치를 충족하는 생산적 일자리라기 보다는 기본소득을 배분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충북 특성과 사회요구를 담은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자 복지서비스 증가에 대응하는 고령자 케어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등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거나 퇴직 전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및 사회적가치 창출형 일자리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미래사회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로봇, 인공지능 등의 인간 노동력 대체에 따라 향후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과학

기술 혁신 가속화로 인해 기술적 실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플랫폼 경제,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노동시장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에는 혁신적 기술이나 대규모 자본을 가진 경제주체들에게 부가가치와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기본소득 개념의 분배가 확대될 것이며, 직접 분배의 형태와 함께 사회적일자리 등 생산적 복지 개념의 분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고령사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복은 복지서비스 유형의 사회적 일자리 모형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변화와 공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개인 노동력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마을 공동체 단위로 사회적일자리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플랫폼 형태의 사회적일자리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수요자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서비스 분야와 시간, 장소, 대상자 등을 등록하면 GIS기반의 지도에 인근지역의 서비스 수요자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가 인근 지역 서비스 수요자와 매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현재 독거노인들의 경우 위험경보장치를 소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센서 불량과 소수의 인원이 현장대응에 투입되고 있어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일자리 확충과 다양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적일자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발굴이나 확산이 어려우며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수요대응형 사회적일자리 전략이 마련되고 마을 공동체 조직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경제주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상호 호혜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소명 의식과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나 사회전체의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적합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수평적 연계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유형별 중간지원조직도 통합되어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 협력이 확대될 때 비로소 사회적경제의 의미있는 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2.

김 현 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선,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와 포럼이 우리 지역에서 마련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실직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중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는 잠재력은 있으나 매우 모호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각종 정책 실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열악한 건강상태, 낮은 학력과 기술 수준 등은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고 여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은 수익 창출이나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목적이 수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 사업의 당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과에 쫓기고 각자 살아남기 바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시장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이거나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 정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부 자활기업이 기존 시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업하는 사례가 있거나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돌봄 일자리 중심으로 저임금의 사회적 일자리가 발전해 나가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통계도 저소득층 취업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9명으로 지난해(0.83명)보다 줄었고 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했으나 소득 3~5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경향신문, 2018.11.23.). 이는, 고용급감 여파가 저소득층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민간단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민관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 대부분을 지원하고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후원자로서의 이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단체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역사회 현황을 소개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방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알지만 잘 설명할 수 없었던’ 개념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의미있는 연구라 여겨집니다. 다만, 그 방대함을 모두 나열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 모호해진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북형 일자리’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 등을 고려해 좀 더 세세히 기술했다면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 살리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도시 재생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돌봄’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 일자리는 더 마을 깊숙한 곳에서, 주민 가까이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동체 회복’이 가장 좋은 대안이므로 사회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지만,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탬니다. 연구 보고서 기술과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하고 연구 방법으로 기술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와 인터뷰’가 동일한 방법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심층 인터뷰를 별도로 하신 게 아니라면 FGI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라는 주제가 매우 연구하기 힘든 주제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말씀이 무례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저는 저대로 토론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3.

오 경 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

토론 4.

양 준 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

- 발 행 일 : 2018년 11월 28일(수)
 - 발 행 인 : 김영석(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전 화 : 043)234-0840
 - 팩 스 : 043)234-0849
 - 홈페이지 : www.cwin.or.kr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cwin.or.kr